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4호

### 체육시민연대칼럼

**체육 분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공무원직과 지방공무원의 체육 직렬 신설 제안**

주성택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소장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김포FC 유소년선수 사망사건 1년 후

**극단선택한 김포FC 유소년 부 “축구협회 징계 가벼워...재심요청”**

이의진 연합뉴스기자

### 김포FC 또다른 사건

**김포FC 성추행 사건 ‘은폐, 축소’ 의혹...대표이사 “언론보도 통해 알았다”**

정일형 뉴시스기자

### 스포츠혁신 4년②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최윤정 뉴스타파기자

### 휠체어그네, K리그 장애인석 사태 등

**장애인은 스포츠관람권, 놀 권리 누리면 안 되나요?**

이원무 칼럼니스트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 분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공무원직과 지방공무원의 체육 직렬 신설 제안



주성택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우리나라 체육 전공자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해 보면 그 누구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체육백서(2021)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육 관련 학과는 전문대학의 경우 176개교, 학생 수는 총 1만 3,655명(남학생 1만 508명, 여학생 3,147명)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524개교, 학생 수는 총 6만 9,720명(남학생 5만 186명, 여학생 19, 534명)으로 총 700개교로 총 83,375 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다. 또 체육계열 학과 대학원(석사, 박사) 학과 수는 총 453개(석사과정 328개, 박사과정 125개)이고, 대학원생 수는 총 8,551명(석사과정 6,524명, 박사과정 2,027명)으로, 체육 관련 전공자들은 매년 20,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체육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체육계 환경 변화 등으로 체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육은 대표적인 융복합(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5대 기술이 주요 변화) 분야로 체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직 및 지방직 공무원에 “체육 직렬”을 추가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 시대 체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육 정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육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체육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육정책의 전문성 및 영속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 체육과 관련된 부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직 및 지방직 공무원 직렬에 “체육 직렬”의 부재는 전문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체육 관련 부서는 순환보직 형태로 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 업무 파악 후 전문성 있게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직렬에 “체육 직렬” 추가를 통해 매년 국가직 10명, 지방직(지방자치단체당 1명 기준) 245명 등 총 255명 공무원 신규 채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스포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을 통해 체육 정책의 전문성 및 영속성 강화로 스포츠복지시대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와 스포츠 산업 강화에 앞장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대학 관계자, 체육인들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22대 국회에서 체육 직렬이 신설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해 본다.



# 극단선택한 김포FC 유소년 父 “축구협회 징계 가벼워...재심요청”

약 1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숨진 10대 선수의 아버지 정모 씨는 15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유소년 팀 코치들은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 행위로 내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를 방관하고 모든 사안을 승인한 감독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영구적으로 축구를 할 수 없도록 제명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축구계에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징계 수위를 높여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9일 구단 유소년팀 전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유소년팀 전 감독에게도 자격정지 2년, TMG FC 감독과 당시 함께 뛰던 선수 A군에게도 각각 자격정지 1년으로 징계했다. TMG FC는 숨진 유소년 선수가 중학교 때 소속된 팀이다. 정 씨는 전 김포FC 유소년 지도자 3명에게는 영구 자격정지, TMG FC 감독·A군에게는 자격정지 3년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모 군은 지난해 4월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김포FC 유소년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중학교 시절 동료인 A군을 원망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도자들은 올해 4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일 공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주일 만에 다시 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 정지는 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내 상급 기관인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 씨뿐 아니라 징계받은 A군의 부모도 이날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부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문자·이메일 통보로 징계 절차를 끝냈다"며 "고인과 전혀 연락하지 않던 상황에서 유서에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 김포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관련이 없는데도 축구협회가 증거 없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 사건의 초기 조사를 수행한 스포츠윤리센터를 향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불리 징계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 김포FC 성추행 사건 '은폐, 축소' 의혹... 대표이사 "언론보도 통해 알았다"

경기 김포FC 유소년 축구 선수가 지난해 극단적 선택한 데 이어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김포F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수단 관리실 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행감에는 지난 1일 취임한 홍경호 김포FC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정영혜 의원은 이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었냐"고 질의하자, 홍경호 김포FC 대표이사는 "지난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아무리 취임한 지 얼마 안됐다고 해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직무대행도 있고, 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대표이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주말에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확인해 본 결과 학생들의 숙소가 문제였다. 근본 원인은 숙소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2인1실, 두평 남짓한 공간이다"면서 "하지만 솔터구장 옆 6인1실에는 헬스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다. 뭔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 홍 대표이사는 "6인1실의 합숙소 해결 문제와 취약한 인권 상황에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지도자와 합숙소 관리자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주말에는 기숙사 생활이 아닌 집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당시 김포FC 권한대행이었던 박영상 행정국장에게 "유소년 극단 선택 사건이 1년이 지났다. 많은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또 다시 이런일이 재발했다. 엄중한 사안에서 보고가 없었다. 유소년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했는데, 그때도 보고가 없었다. 은폐 축소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행정국장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면 공식적인 답변을 했을 것이다. 일부러 쉬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날 코치한테 보고받고 사무국에서 입단 계약서에 있는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했다"면서 "현재 피해 학생도 있는 상태고 부모님들도 다 끝난 사건에 대해 재조명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 행정국장은 특히 "지난 4월21일 보고를 받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현재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별 면담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은폐·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정영혜 의원은 "지난 4월21일 성추행 사건 가해자 9명 중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국장은 "모른다. 누구인지 별도로 보고 받은 건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왜 모르냐, 연계된 사건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박 국장은 "사건이 다른데 어떻게 연계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극단적 선택한 학생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이번 사건에도 있느냐'는 정영혜 의원의 질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정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지난해 극단 선택한 A씨의 가해 학생이냐고 두번씩이나 질의한다. 시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또 한번의 위험을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 선택한 A학생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됐다"면서 "정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을 가해자로 두번씩이나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른들이 처벌을 받기 원한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서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K리그2 김포FC 유소년팀에서 이번에는 선수 간의 성추행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4월 21일에는 김포시 통진읍 김포FC 유소년팀 숙소에서 B군 등 고등학교 1학년 선수 6명이 고교 2학년 선수 C군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김포FC는 다음날인 4월 22~24일 B군 등의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지난 4월 26일 가해 선수 6명 전원을 대상으로 입단 해지 조치를 했다.

또 B군 등의 범행에 동조하거나 지켜본 다른 고교 1~2학년 선수 3명에게는 훈련 중지 및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대상자 중 2명은 높은 징계 수위에 반발해 자진 탈퇴했다.

앞서 김포FC에서는 지난해 4월 10대 유소년팀 선수 A군이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김포FC 유소년팀 전 코치와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2~3년의 징계를 내렸다.

##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2018년 2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유소년 축구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는 팀의 감독이었다. 감독은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숙소 훈련장에 선수들을 세워놓고 뺨과 엉덩이를 때렸다.

폭행 사실은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졌다. 감독은 아이들이 경기에 어떻게 기용될지 결정하고, 유소년 선수들의 진학 문제를 좌우한다. 대다수 부모들은 이 사건에 침묵했다. 문제 제기를 한 학부모는 임효준 씨가 유일했다. 임 씨는 폭력을 당연시하는 가해자와 학부모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왜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를 맞아가면서 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임 씨의 아들은 폭행 이후 팀을 떠났다. 진학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였지만 당장 축구 선수로서 활동이 막혔다. 소속 팀이 없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고, 훈련할 공간도 없었다.

가장 막막한 건 진학 문제였다. 임 씨와 아들은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여러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진학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어렵사리 기회를 잡아 임 씨의 아들은 아직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힘든 시간이었다. 폭력 사건을 겪은 피해자가 오히려 '팀 탈퇴'라는 처벌을 받고 고통을 겪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폭행 드러나도, 징계 받아도... 가해자는 여전히 '감독님'

피해자 선수와 가족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가해자 감독은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폭행 사건 일 년 뒤인 2019년 4월,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원 선고가 나온 뒤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 씨는 취재진에게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했다. 협회는 가해자 징계에 미온적이었다. 협회는 임 씨에게 재판 결과가 나와야 공정위원회 (체육단체의 징계 기구)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징계를 원한다면 민원을 제기한 임 씨가 먼저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 씨가 꾸준히 민원을 넣고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징계 후에도 가해자 감독은 축구팀에 남아 계속 활동했다. 경기 때 지도자 자격으로 벤치에 앉지 않았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감독은 선수들과 만나 함께 있었다. '송년의 밤' 같은 팀 내부 행사에서는 그는 여전히 '감독님'으로 소개받아 무대 위로 나왔다. 해당 축구팀을 소개하는 홍보 자료에도 가해자 감독의 이름과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나 마나한 협회의 자격 정지 처분에 임 씨는 다시 분노했다.

**“자격정지가 됐으면 못 해야죠. 안 해야죠. 그런데 이름만 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 임효준, 폭행 피해 선수 아버지

사건 이후, 바뀐 것은 팀의 간판뿐이었다. 팀 합숙시설로 가는 길목에는 예전 이름을 건 낡은 입간판이 서 있다. 이 축구팀은 이른바 '사설 클럽'이다. 징계를 받은 감독이 직접 운영하고, 감독의 가족이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 유소년 선수들을 합숙시설에서 관리하고 교육과 훈련 등을 수행하는 공인된 교육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반 학원이나 다른 자영업과 다를 바 없다.

임 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팀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감독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제재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폭행 가해자인 감독은 본인의 활동이 지도자로서의 지도 행위가 아닌, 사설 클럽 대표로서의 경영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축구팀 경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가족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설 클럽의 경우, 협회가 징계 규정 위반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임원으로도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만약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임원으로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일일이 파악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 민원 없으면 징계도 없다... '허점 투성이' 징계 시스템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비단 이 클럽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지도자들을 조사했다. 관련 판결문과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들의 명단 등을 입수해 교차 분석했다. 유소년 선수를 폭행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아예 협회의 징계 자체를 피해 간 사례가 확인됐다.

2013년부터 6년간 운영된 경기도의 한 고교 축구클럽. 2015년 6월, 팀 감독은 합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선수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다른 선수를 불러 피해 선수의 식발을 지시하기도 했다. 감독의 폭행으로 피해자 선수는 팀을 떠났다. 하지만 가해자 감독은 계속 지도자 활동을 이어갔다. 폭행 이후 7월부터 이어진 연습 경기들에서도 폭행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다. 이듬해 2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음에도, 2019년 클럽이 문을 닫을 때까지 지도자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감독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당연히 징계도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20만 명 등록 선수, 지도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민원이나 제보가 있지 않으면 그걸 파악하고 징계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피해자 선수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협회가 사건을 알 수도, 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사건의 폭행 가해자 감독은 현재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의 체육회가 운영하는 축구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활동 중이다. 취재진은 팀의 등록 담당자를 통해 감독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 준비 없는 스포츠클럽법, '사각지대' 사설 클럽의 위험 커졌다

사설 클럽은 학교 운동부나 기업·지자체가 운영하는 클럽과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 바깥에 있는 운동부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3세 미만 유소년을 가르치는 경우는 2020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도록 체육시설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있는 클럽 팀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다. 학교 운동부나 직장 운동부가 아닌 스포츠클럽이 지자체 등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클럽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클럽 운영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클럽법은 엘리트 체육 교육의 문제를 잡겠다며 추진됐다. 지역에 클럽이나 지도자, 인프라가 없어서 외지의 합숙시설을 이용하는 일을 줄이고, 유소년 선수들의 인권과 교육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서 제도 밖 사설 클럽이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입법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0년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이미 이런 사설 클럽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조단에 따르면, 사설 클럽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훈련받은 유소년 선수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선수의 19.7%가 신체적인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학교 안 운동부 선수의 경우 이 비율은 13.8%였다.

현재 사설 클럽 지도자들을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 체육회나 종목 단체 같은 소속 단체 정도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이들 단체의 징계 시스템은 허점 투성이다.

일단 문제가 있어도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폐쇄적인 스포츠계의 분위기로 인해 팀 지도자의 폭력과 비리를 선수가 스스로 알리는 사례가 적다. 인권위 특조단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를 제외한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는 연평균 70여 건에 불과했다. 특조단 조사에서 5만 7천여 명 가운데 8000여 명이 신체 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어렵게 신고가 접수돼도 스포츠 단체는 소속 지도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미온적이다. 징계 양형 기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른바 온정주의나 사적 관계가 작용하는 일도 많다.

**“저 사람은 옛날에 메달을 땀으니까, 성과를 냈으니까, 그동안 기여한 바가 크니까, 심지어는 나하고 친하니까. 처벌을 감경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애들이 좀 맞을 수도 있지, 너무 과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지도자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피해자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가해자를 걱정하는 분위기에서 회의가 열리다 보면 당연히 감경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 김현수 전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징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공유되지 않거나, 같은 스포츠계 인사들끼리 암암리에 묵인해가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문제가 있다. 문화연대 집행위원인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이력서를 내고 들어왔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력하다”라고 지적했다.

### 스포츠윤리센터 3년, 징계권도 없이 '비위 뿌리뽑겠다'?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스포츠 비위 사건을 독립적 기구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관이다. 센터는 문체부 장관을 통해 관련 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각 협회의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출범 3년 차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권이 아니라, 징계를 권고하는 요청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협회에서 센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권과 더불어 비위 행위자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석재 홍보·대외협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권고한 징계와 실제 징계 수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직접 징계권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은 스포츠관람권, 놀 권리 누리면 안 되나요?

얼마 전 프로축구 K리그와 관련해 씁쓸한 소식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수원FC를 상대로 한 울산의 원정 경기 전 울산 홍명보 감독은 경기장 한구석에 임시로 장애인 관람 구역이 마련된 걸 봤다. 그가 가리킨 곳엔 울산 원정 유니폼을 입은 한 관중이 앉아 있었는데 경기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못했고, 경기장 구석에 붉은 띠로 장애인 관람 구역만 따로 설정해놨다.

수원FC 측 관계자는 원정 팬이 유니폼을 입고 응원할 상황이면, 홈 팬과 원정 팬 간 마찰 방지를 위해 “관중에게 원정팀 유니폼 벗고 응원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석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임시 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후 관중 의사에 따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종합운동장의 경우 원정 팬들을 위한 장애인석은 없었다. 물론 홈 팬 장애인석은 있었지만 말이다.

이와 관련해 홍 감독은 수원FC 측에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축구 경기력과 상관없이 장애인 인권 부분이 향상되고 있지 않기에, 인식이 좀 더 개선돼야 함을 피력하는 등 쓴소리를 냈다. 이후 결국 울산 측 요청으로 해당 관중은 관중석으로 옮겨 경기를 관전했다. 수원 측에서 안내한 관중석 안 장소도 정식 장애인석은 아니라고 했지만 말이다.

임시 장애인 관람 구역을 실제 사진으로 봤는데, 전광판에 가려 축구 전체를 보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홍 감독의 지적은 일리 있다고 본다. 또한, 경기 도중 공이 운동장으로 날아가면 자칫 잘못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울산 팬이 축구공에 맞는 부상사도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한 등 안전한 축구 관람에도 위협이 되니 말이다.

경기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원정 팬 장애인석을 설치하면 되겠으나, 경기장과 수원시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란 문구를 들먹이며, 설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경기를 보며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장애인의 권리는 박탈되는 거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면, 과도한 부담 아니게 장애인석 설치 방법도 분명 나올 거다.

이 일 발생 전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장애인석 관련해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관람석의 경우 규격 기준(1석당 폭 0.9m, 깊이 1.3m 이상)보다 작은 경기장이 4개로 19.0%를 차지했다. 또한, 관람석 앞의 건축물로 인한 시야 방해로 경기 관람에 지장이 있는 경기장은 5개나 됐다. 이런 식이면, 폭이 1m 정도 되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엔 자유로운 경기 관람이 어려울 정도다.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시기에 수원종합운동장이 지어졌으니 장애인석에 대한 세심한 생각은 아마도 없었을 게다. 물론, 지금은 홈 팬 장애인석이 마련됐다고 하나, 원정 팬 장애인석은 없으니, 이런 것만 봐도 경기를 보는 스포츠관람권의 주체로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는 경기장과 수원시 측의 민낯이 많이 느껴질 정도다. 유명한 홍명보 감독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팬이 관중석으로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이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9년 전 성악가 조수미 씨는 전국의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지만, 이 그네에 대해 학교에 안전기준이 없고, 인증되지 않은 휠체어그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휠체어그네를 철거·처분했다. 7년 전에 세종시에 있는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도 조수미 씨로부터 '휠체어그네'등을 기증받아 보관하다, 학교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하니, 설치 6개월 후 휠체어그네를 철거하다, 2019년 11월 처분했다.

이를 뒤늦게 안 세종시의 최고진 현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미씨에게 사과하며, 안전기준 마련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안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최 교육감이 그렇게 말하기 전, 무장애 통합놀이터 관련 설문 조사에서 약 98%가 그 놀이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결과를 통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2019년 오마이뉴스에서 지적했었다. 장애계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 2, 3차 민간보고서를 통해 놀이환경으로부터 심각하게 배제된 장애아동에 관해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다.

장애계와 시민사회에서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강조하는 것에 국가는 별로 관심 없다가, 세종시 교육감인 최 씨가 휠체어그네에 관련해 상의 없이 조수미 씨를 무시했다며 사과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을 방문해 얘기하니 정부에서 이제야 관심을 보이며 휠체어그네 설치 안전기준안 반영을 하는 모양새다. 조수미란 유명인이 결국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이슈화시킨 셈이니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계,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9년 동안 요구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걸 통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배제됐음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은 씁쓸하고 화난다. 사실은 휠체어그네, 무장애놀이터를 이용할 장애아동과 이들의 놀 권리를 주장한 장애계 등에게도 사과했어야 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최 교육감이 한 행동은 장애아동 등에게 무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사람이고 권리 주체란 건, 이 사회에선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다. 장애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놀 권리와 스포츠관람 등에서도 여전히 사실상 장애인을 배제하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홍명보 감독이나 성악가 조수미씨와 같은 유명인이 있어야 겨우 해결하는 시늉을 취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니 그냥 헛웃음이 나온다. 하긴 시혜와 동정으로 대표되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우리 사회를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 말이다.

같은 사람이지만, 비장애 중심의 사회환경이라, 장애인은 놀 권리와 스포츠관람 등에서도 존중받고 보장받기 위해 매일을 싸워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만드는 사회는 분명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닐 게다. 이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놀 권리와 스포츠관람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폐기하고 인권적 모델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불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국가와 지자체는 제대로 듣고 방안을 수립하길.

# 주간 스포츠 소식

"중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사법처리 수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3123&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3123&plink=ORI&cooper=NAVER)

[김태우의 쓱크랩북] 센서가, 뇌파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SSG 육성에 접목된 과학,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490>

사우디 '스포츠 워싱'에 메시 이용...최대 320억원 받는 계약 체결

<https://www.fnnews.com/news/202306190708026371>

"종합격투기, 스포츠 아니다" 발언한 시의원에 로드FC '발끈'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9168>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베를린서 개막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3061986967>

유통家, 테니스·야구 등 '스포츠 후원' 활발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646>

태백시, 스포츠 시설 확충...400억 원 투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2456&ref=A>

제주, 중.장년층 인기 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746>

인제군체육회 이기호 회장 "스포츠+힐링, 인제만한 곳 없습니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6191417003&sec\\_id=5301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6191417003&sec_id=530101&pt=nv)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